

미중 무역 분쟁과 중소기업 대응

| 외부 필진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정화 경영학부 교수 | 한양대학교

목차

시작하는 말	02
투키디데스 함정	03
혁신국가 중국	04
중국정부의 대응	05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	07
한국에의 영향	08
대응 방안	09



시작하는 말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1차에 이어 계속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시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가함으로써 양국 간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2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해 10%를 부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모가 5,055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대미수입은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해도 더 이상 부과할 곳이 없게 된다.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미국은 남아있는 50%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전 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적절한 대응 정책 마련이 절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미중전쟁이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닌 세계 최강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에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그레함 엘리슨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es Trap)'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B.C. 5세기 패권국 스파르타가 신흥국 아테네를 꺾기 위해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테네의 세력 강화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엘리슨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500년간 투키디데스 함정이 16번 발생했는데 그 중 12번이 전쟁으로 비화됐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17번째 함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진핑의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중국이 경제지적중단을 이루어나가고, 애국심을 불어넣고, 국제문제에서 어떤 다른 세력에도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서양이 침범해오기 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누렸던 지배적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존대를 받는 중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중전쟁을 문명의 충돌 관점에서 설명한다. 미국의 핵심가치는 '자유'인데 반해 중국의 핵심가치는 '질서'이고, 중국은 미국이 만든 '규칙과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만나본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억누르고, 깎아내리고, 내부를 분열시키고, 지도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다루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7% 대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는데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절감하게 되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2030년 경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국의 외환 보유액 3조 2천억 달러였으며, 경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자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를 강화하고 차관외교를 통한 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 영향력을 강화했다. 중국이 제2025에서 10개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을 천명하자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지난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국 인식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연설의 핵심은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을 이용하여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 체제가입이후 자유로운 국가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오히려 관세, 쿼터, 통화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 절도, 산업보조금 제공 등을 통하여 자유공정무역에 대한 모순된 정책을 사용한 결과 3750억 달러에 이른 무역적자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 일자리,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까워서 새로운 냉전시대의 대두를 시사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80년대 미국의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를 연상하게 한다. 미국이 대일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엔고 시대를 만들어 냈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었다. 플라자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무역역조가 심화되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무역역조 완화를 위해 철강의 반덤핑 관세, 자동차의 자율규제협정(VRA)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은 강제 엔화절상을 통하여 일본을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제2플라자 합의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중국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무릎 꿇고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1990년대 이래 미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었다. 여기에 중국이 도전을 해오자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아편전쟁(1840)과 남경조약(1842) 이후 굴욕의 역사를 벗어나 세계의 리더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America First)' 전략과 정면 충돌을 일으킨 상황이다.

혁신국가 중국

미중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혁신국가로서 중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과 미국의 기술패권 유지라는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을 내어 주면서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市場換技術)에서 최근 10년 간 첨단기술 혁신에 앞서가는 국가로 변신하는 전략(自主創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이 기술혁신 면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차세대 IT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유경제 플랫폼이나 핀테크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R&D 투자에서는 세계 2위이지만 특허출원은 1위가 되었다. 화웨이는 세계 기업가운데 가장 많은 R&D 투자와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선박, 선진 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에서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중국은 전자상거래, SNS, 가상현실, 인공지능, 드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안면인식이나 음성인식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전기자동차 기업 BYD, 드론 기업 DJI, 로봇의 메이디 등은 각 분야의 시장 선도 기업이다.

시진핑 주석은 10월 31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했다. AI가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슈퍼 컴퓨팅, 인지 과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창출하며 AI가 발전함에 따라 딥러닝, 크로스오버 융합, 인간-기계 협동, 셀프 제어 등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차세대 AI 발전은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쥌 수 있어 중요하다.”면서 “중국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며 생산력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핵심 기술을 가져야 한다.”면서 “AI 기초 이론의 연구 강화와 더불어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인 돌파를 마련해 중국이 AI라는 중요한 분야에서 앞서가고 핵심 기술을 반드시 중국의 손안에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타트업 활성화 면에서도 최근 중국의 약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창업을 독려하자 지방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책에 힘입어 매일 1만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2016년에는 연 60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나타났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성공한 창업자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중국 청년들의 창업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최근 5년간 100조 원 규모를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차세대 기업을 키우고 있다. 중국 유니콘 기업의 60%가 이들 기업으로 투자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162개의 유니콘 기업을 갖게 되었다. 투자자본 회수기간도 IPO 3.9년, M&A 3.5년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응

미국 정부가 최근까지 중국에 요구해온 내용은 지식재산권 절도, 외국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유리한 산업 보조금 정책,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 지원 정책, 불투명한 비관세 장벽, 과도한 외자 기업 시장 진입 제한, 무역수지 불균형,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관행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중국 정부주도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폐기와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규제와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시장을 좀 더 개방하겠다는 것 외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제조 2025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으로서 당분간 분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무역 분쟁이 양국과 세계에 부정적이 영향을 가져 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과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제조분야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강력한 내수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주식시장과 기업 대출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통상마찰과 증시 부진 등의 역풍을 맞게 되자 7~9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5%에 머물면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속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제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5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50.6에 못 미쳤고 9월(50.8)보다 나빠졌다. 2016년 7월(49.9)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제조업 PMI가 낮아진 것은 중국 경제가 경기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수출 PMI는 46.9로 9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16년 1월(46.9)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신규 수출 주문 감소는 향후 제조업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 역시 53.9로 9월(54.9)보다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의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제조업 PMI는 51.6으로 평균을 웃돌았으나 증견·중소기업은 각각 47.7 49.8로 집계돼 위축세가 뚜렷했다. 중국 정부가 부채 축소 정책을 이어가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늘었고 동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렬해지면서 제조업 확장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당분간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 경영난이 비교적 크고, 장기적으로 누적된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경제둔화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보여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민영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민영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민영경제의 발전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활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업체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해 전망이 좋은 기업에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 11월 출범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은 중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은 증시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줄이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이 은행으로 전가되게 되면 금융산업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 결과로 파생되는 부담은 정부가 떠안겠다는 의지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면에 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

미중 무역 분쟁, 누가 승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중국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굴복하고 출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중국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선 무역규모의 비대칭성(미국수입 5,050억 달러, 중국수입: 1,300억 달러)이다. 서로 관세폭탄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의 범주에 넣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엄밀한 감시를 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은 대미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3% 이상, 외환시장 달러 매입 GDP 2%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감시대상 국가에는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은 유럽, 인도, 사우디 등 강력한 동맹국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다. 이밖에도 위구르 인권, 북한해방, 대만카드 등의 정치적 무기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도 대항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관세 맞불 작전의 한계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산 콩에 관세를 높이면 중국의 소비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진출 미국 기업에 대해 통관지연이나 인허가 지연 등의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어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 국채의 대량 매각도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위안화 지키기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맞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은 과도한 기업부채, 주가하락, 외자기업의 탈중국, 수출둔화로 인한 기업적자 증가, 이로 인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실업률 증가하면 사회불안과 불만이 증대하며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티벳,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또 다른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하지만 중국이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이 여기서 굴복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길러 왔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으며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중국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선도력을 갖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는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품목은 1,102개로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양국의 첨단 기술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고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부과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ZTE 등의 기업에 대해 수출입 제한조치를 단행했다. 2018년 1월 미 국방부가 화웨이,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고, 4월에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ZTE와 거래를 금지했고, 8월에는 연방정부가 화웨이, ZTE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에는 동맹국에게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이 대상인데,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불법 정보 수집이나 통신 방해할 수 있다며 사이버안보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10월에는 미 상무부가 푸젠진화반도체 수출금지에 이어 D램 기술 도용으로 푸젠진화를 기소했으며, 14대 미래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에 착수했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야기되는 손해액은 6,000억 달러이며, 이 중 50~80%가 중국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이유이다.

한국에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면에서 미중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와 경영실적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로 의존도가 높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분야로서 이들 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며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체의 수출의 20%를 넘을 만큼 편중되어 있다. 반도체는 대미 수출품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50% 수준인 상태에서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및 미국 거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부정' 5.3%, '다소 부정' 24.7%로 응답했다. 특히 부정적 영향 예상은 중국거래업체(37.3%)가 미국과 중국 모두 거래하는 업체(28.6%)와 미국 거래업체(23.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업체 가운데 중국 거래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이 평균 16.4%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거래기업은 대미국 수출이

평균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 품목별로는 기계류(36.8%), 잡제품(35.5%), 전자전기제품(33.3%), 철강금속제품(33.3%)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 지속 예상기간은 향후 1년간(41.7%)이 가장 높고 향후 6개월(21.3%), 향후 2년 이상(20.3%) 순이었다. 2018년 8개월간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지만 반도체를 빼면 수출 증가율은 0.37%에 불과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관세폭탄이 중국 성장률을 0.5~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본다.

무역 분쟁은 중국 기업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지 수요의 부진이 예상된다. 실제로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경영애로사항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에서 현지수요 부진을 걱정하는 응답이 현저히 증가했다. 제조업 내 전기전자에서는 수출 부진, 자동차는 현지 수요 부진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내 연구기관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도 예상된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세계 공급사슬 위축으로 세계 무역량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신흥국 경기 침체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중국 주재 다국적 기업의 제조공장이 철수하면 중국에 중간재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 진출했던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도 나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을 제한하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업체는 수출이 증가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무역 분쟁으로 중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 될 수도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위안화 절하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값을 떨어뜨려서 무역에서 나타나는 손해를 통화가치로 상쇄하려는 방법을 찾고자 할 수 있다. 최근 신흥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하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신흥시장 통화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최근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통화가 불안한 것도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한 영향정도 파악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영향정도도 업종, 기업 규모, 중국·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미중 무역 분쟁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유무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별도로 없다'(93.0%)로 응답했고 '자체 대응방안이 있다'는 기업은 7.0%에 그쳤다. 미중 분쟁 관련 정부 대책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강화'(25.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미중 분쟁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정보제공'(22.0%)이 뒤를 이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베트남(42.3%), 인도(23.7%), 유럽(21.7%), 일본(16.7%), 인도네시아(13.7%) 순이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베트남 등의 아세안 국가와 인도 등이 중요한 대안 국가이다. 그러나 생산기지 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인건비 인상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노동집약적 임가공 산업의 생산기지로서 매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로 이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철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어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비교적 단기간에 타결될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이나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 R&D, 마케팅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진단 기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정책지원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기술인증과 특허출원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을 키우고 적기에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트라와 중진공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강화하고 현지 밀착형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지원 성과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미래기술 선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조직관리와 기업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틈새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본글로벌형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정책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GVC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의 도약을 억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안으로서 상대적인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